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41)

유인작적(誘人作賊)

사람을 유인(誘引)하여 구적(寇賊)을 만들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국가나 사회에 골치 덩어리로 생각되는 것이 구적(寇賊)이라고 불리는 도적 떼다. 그들은 무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노략질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개인으로서는 이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으니 그저 하릴 없이 당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적이란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구적이 있다면 소탕하여 밭불일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안심하고 국가권력을 믿고 그 정직적 지휘에 기꺼이 따른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을 친 관원이 구적을 토벌하라는 임무를 맡고서 휘하의 병졸을 지휘하여 이미 만들어진 구적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멀쩡하게 구적을 토벌하도록 동원된 병사 혹은 멀쩡한 민간인이 구적에 합류하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구적들의 세상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역사를 보면 남송 초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북송의 휘종과 흠종이 금(金)에 포로가 되어 간 다음에 남송 고종(高宗)이 응천부(應天府)에서 황제에 오른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시기에 송(宋)나라는 금(金)나라에 금(金)이나 은(銀) 같은 보물을 모두 빼앗겼으니, 새로 탄생한 남송 조정에서는 당장 국가를 운영할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부세(賦稅)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하니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다가 하는 수 없이 산속으로 도망하는 유민(流民)이 생겼고 이들 유민들이 모여서 도적떼가 되었다. 살기위한 수단이었다. 원래 이러한 유민들은 국가의 피해자이지만 일단 도적 떼가 되면 가해자로 돌변하여 이곳저곳을 다니며 노략질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조정에서는 이 구적을 진압해야 정부의 권위도 세워지고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구적의 진압은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된다.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우위지역이라고 할 강남 절강(浙江)지역에서 일어난 구적(寇賊)의 세력이 커졌다. 남송조정에서는 이를 진압하지 않으면 송왕조의 재건도 위협에 빠질 상황이었으나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고 하여도 구적의 진압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조정에서는 드디어 주격(周格)과 고사동(高士瞳)에게 관직을 주어서 이 임무를 맡겼다. 이 때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그래도 1만여 명이나 있었다. 이 정도로 적지 않은 수를 가진 군대라면 아무리 커다란 구적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제어할 무력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무력을 가진 진압책임자인 고사동은 되도록 구적들과 전투를 하지 않고도 항복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졌다. 사실 이러한 유화정책은 성공한다면 좋은데, 그러려면 관군은 그 힘을 구적들에게 보여 주어서 구적들이 스스로 관군을 상대할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의 준비를 해 놓은 상황에서 고

설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구사동의 유화책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결국 피아(彼我)의 힘의 우위를 점검함도 없이 관군은 당연히 구적들보다 강한 무력을 가졌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유화정책을 편 것이다. 그러나 구적들은 살아남으려는 세력이므로 교섭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상대를 살피었고 기회가 있다면 속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사동은 유화책을 내 놓은 것은 '구적은 행복하기만 하면 죄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적 가운데 높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였다.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이라면 구적들이 반기워하며 구사동에게 와서 행복하고 구적의 생활을 청산할 만도 하였다. 그러면 구사동은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진압작전이 성공할 것이다. 정말로 구사동의 생각한 대로 될까?

이러한 고사동의 이 순진한 대책을 본 적여문(翟汝文)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구적들은 이미 관군의 주수(主帥)를 죽였고, 물자를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조신(漕臣)을 목 베었다.'고 구적들의 죄를 지적하였다. 관군의 지휘자와 물자를 운반하는 책임자를 죽이고 도적질을 하였는데,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더라도 상대가 스스로의 잘 못을 인정하게 하고, 그런 잘 못이 있음에도 받아들인다는 것은 큰 은덕을 베푸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유인작적 조치가 남송초 아직 질서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던 시절에만 있었던 일일까? 혹 오늘날에도 정책을 만들고 조치하는 가운데서 원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드러내서 유인작적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의 방역으로 온 나라, 온 세계가 온통 난리였고, 지금까지도 이 긴장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강력하게 집회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펴다. 교회의 모임도 제한하였고, 자영업자들이 자동차 안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것도 제한하였더니 모두 잘 순응하였다. 그만큼 이러한 방역대책은 불편하지만 참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을 얻은 때문이다. 그런 데 오직 민노총의 집회만은 정부의 조치에 아랑곳 없이 강행되었고 정부도 손을 놓다시피 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에 가입하면 큰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업장의 사용주는 일부 민노총의 실력행사로 사업을 접고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 생겨나서 뉴스의 사회면을 장식하였다. 이제 자영업자 가운데는 사업을 접고 민노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비유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만 남송초 구적(寇賊) 속에 들어가야 먹고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구적의 수가 늘어났던 상황이 머리에 떠오른다. 원래 노조(勞組)는 약자들이 살길을 찾아서 서로 단결하였던 모임이었지만, 지금에는 그 힘을 커져서 기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직장을 대물림하면서 실제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이제 그들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이며 때로는 법질서를 아예 무시할 정도의 세력이 되었다.

당국자의 대(對) 노조(勞組) 정책을 보면서 엉뚱하게도 남송초에 구적(寇賊)을 대하였던 남송조정의 대책이 오버랩 되어 읽히는 것은 나의 지나친 비약일까?